NEWSLETTER

October 2022

디지털금융팀 / 블록체인팀

Digital Finance Team
/ Blockchain Team

CONTACT



변호사 윤종수

T: 02.6386.6601
E: jay.yoon
@leeko.com



변호사 고환경

T: 02.2191.3057
E: hwankyoung.ko
@leeko.com



변호사 강현구

T: 02.772.4429
E: hyunkoo.kang
@leeko.com



변호사 이정명

T: 02.6386.0730
E: chloe.lee
@leeko.com



변호사 임승준

T: 02.6386.0795
E: seungjun.lim
@leeko.com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13)

•••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발표

1. 미국의 '디지털자산의 책임있는 발전 프레임워크' 발표

지난 2022년 9월 16일 미국 백악관(이하 **미국 행정부**)은 '디지털자산의 책임있는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각 기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3월 9일 '디지털자산의 책임있는 발전'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표한 후 지난 6개월간 위 행정명령에서 추진하기로 한 6가지의 과제, 즉 (i)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ii) 금융안정성 강화, (iii) 불법 금융 퇴치, (iv) 글로벌 금융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 (v) 금융 포용 및 (vi) 책임있는 혁신의 과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 업계, 학계 및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을 반영하여 '디지털자산의 책임있는 발전'을 위한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9개의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 투자자 및 기업 보호**

디지털자산은 그 가격의 불안정성, 판매자의 불충분한 정보의 공개, 관련 법령 미준수 및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소비자, 투자자 및 기업에 중대한 리스크를 줄 수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와 규제당국은 관련 지침을 발표하고 집행 자원을 늘리며 부정 행위자를 적극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같은 규제기관이 디지털자산 분야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집행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장
-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소비자 불만을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기만 또는 남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장
- 규제기관들이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현존하는 긴급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과 규칙을 발표하고, 규제기관들과 법집행기관들이 소비자, 투자자 및 기업이 직면한 심각한 디지털자산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디지털자산에 대한 소비자 불만 데이터를 공유하여 각 규제기관의 활동이 최대한 효과적일 수 있도록 권장
- 금융문해교육위원회(FLEC)는 소비자가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고 일반적인 사기 관행을 파악하며 위법 행위를 신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활동을 주도

■ **안전하고 경제적인 금융서비스 이용 촉진**

미국 행정부는 일부 디지털자산은 신속한 결제를 촉진하고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금융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진정한 혜택을 주고 부정적 금융 관행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금융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규제기관은 즉시지불시스템(instant payment systems)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불제공자(payment providers)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사용을 지원하고, 적절한 경우 자체 거래에 FedNow와 같은 즉시지불시스템의 채택을 장려
- 대통령은 비은행 지불제공자(nonbank payment providers)를 규제하기 위한 연방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제기관의 권고를 고려
- 규제기관은 즉시지불시스템을 통합하는 새로운 다자간 플랫폼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지불 관행, 규제 및 감독 프로토콜을 조정함으로써 국경간 지불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 국립과학재단(NSF)은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접근 가능하게 설계하도록 기술 및 사회기술 분야와 행동경제 연구를 지원

■ **금융안정성 강화**

미국 행정부는 테라(TerraUSD) 붕괴를 예로 들며 디지털자산과 주류 금융시스템간의 밀접한 관련성은 점점 더 높아져가고 있으며, 일정한 혼란은 연쇄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재무부는 금융기관과 협력해, 정보를 공유하고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을 촉진함으로써 사이버 취약성을 식별하고 완화하는 능력을 강화
- 재무부는 다른 규제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자산 시장과 관련된 새로운 전략적 위험을 식별, 추적 및 분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같은 국제기구를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과도 이러한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협력

■ **책임있는 혁신 추진**

미국 행정부는 민간 부문 혁신을 준비하는데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이러한 전통에 따라 '책임 있는 디지털자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국립과학재단(NSF)은 차세대 암호화, 트랜잭션 프로그래밍 가능성, 사이버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디지털자산의 환경 영향 완화 방안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한 기초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연구 개발 아젠다를 개발할 예정이며, 개발된 혁신적인 기술을 제품으로 만드는 연구도 계속적으로 지원
- 재무부와 금융규제당국은 새로운 금융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적인 미국 기업에 적절한 경우, 기술 스프린트(tech sprints) 및 혁신 시간(Innovation Hours) 등을 통해 규제 지침, 모범 사례 공유 및 기술 지원을 제공
-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및 기타 기관은 디지털자산의 환경 영향을 추적하고, 적절한 성능 표준을 개발하며, 지역 당국에 환경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도구, 자원 및 전문 지식을 제공
-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연방 기관, 산업, 학계 및 시민사회와 함께 연방 규제, 표준, 조정 활동, 기술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기 위해 상임 포럼 설립을 검토

■ **글로벌 금융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금융 리더십을 강화하고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미국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미국 규제기관들은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위치를 활용하여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미국의 가치를 전달하고, G7, G20, OECD, FSB,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 및 국제 표준화 기구와 같은 국제 기구 등에서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리더십 역할을 지속 및 확대 등
- 국무부(State Department), 법무부(DOJ) 및 기타 미국 집행 기관은 Egmont Group과 같은 글로벌 집행기관과 상호 정보 공유 및 역량 구축을 통해 외국에 있는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을 강화
- 국무부, 재무부, 미국국제개발처(USAID) 및 기타 기관은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추가 기술 지원을 모색
- 상무부는 첨단 미국 금융 기술과 디지털자산 회사들이 그들의 상품에 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불법 금융 퇴치**

미국 행정부는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AML/CFT) 프레임워크를 적용함에 있어 리더의 역할을 해 왔다고 밝히면서, 디지털자산의 불법 사용에 효과적으로 맞서 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대통령은 디지털자산거래소와 NFT 플랫폼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자들에 대한 법 적용을 위해,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제보방지법(anti-tip-off statutes), 미인허가 송금(unlicensed money transmitting)을 금지하는 법 등의 개정을 의회에 요청할 것을 고려
- 법적 규제 및 감독 체제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부문의 발전과 그와 관련된 불법 자금조달 위험을 계속 감시하고, 이 노력의 일환으로 재무부는 2023년 2월 말까지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불법금융위험평가를, 2023년 7월까지 NFT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예정
- 관련 부서 및 규제기관은 불법 행위자를 지속적으로 색출하고 디지털자산의 남용을 해결
- 재무부는 기업들이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기존 의무와 불법자금조달 위험을 이해하도록 민간 부문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의무 준수를 위하여 신흥 기술의 사용을 장려

■ **미국 중앙은행디지털화폐(U.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대한 연구**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CBDC가 보다 효율적인 지불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고, 기술 혁신에 대한 기초 제공, 보다 빠른 크로스보더 거래의 활성화, 환경과 관련한 지속가능성, 소비자 범위의 확장과 포용 금융의 촉진, 경제 성장 및 안정성의 증대, 사이버위험과 운영위험의 방지, 민감한 정보의 보호 및 불법 금융거래의 위험성 최소화 등과 같이 큰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미국 CBDC 시스템을 위한 정책목표를 개발하여 왔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연준(Federal Reserve)으로 하여금 CBDC에 관한 리서치, 실험 및 평가를 지속할 것을 촉구하면서, 연준과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 과학기술정책실(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및 재무부(Treasury Department)가 정기적으로 CBDC및 기타 지불 관련 혁신에 관한 진행상황 및 업데이트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 시사점

미국에서는 2022년 6월 7일 디지털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제의 틀을 마련한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이 발의되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6월 30일 디지털자산을 그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규제를 정한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이 마련되어 향후 최종 합의안이 22개 EU 공식 언어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향후 경제 및 금융부문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규제 방향을 정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올해 주요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 법안들과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바, 따라서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및 각종 법안 등 각국의 규제 및 입법 논의 사항들에 대해 주목하고 우리나라의 규제 및 입법 방향에 대한 참고 자료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블록체인팀은 블록체인, NFT 및 가상자산 사업 등과 관련하여 국내·외 고객을 위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 또는 블록체인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1) - 보험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동향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2) -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제정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3) - 머지포인트 사태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의 재조명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4) - NFT 관련 제반 법적 고려사항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5) -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과 법적 고려사항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6) -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 동향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7) -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완화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8) -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한 증권성 판단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9) -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10) -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11)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 제도 도입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12) -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디지털금융팀 브로슈어



블록체인팀 브로슈어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

Lee &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사무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우 04532)
판교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31, 판교테크원타워 3층 (우 13529)
Tel : 02-772-4000 | Fax : 02-772-4001/2 | E-mail : mail@leeko.com | www.leeko.com